

## 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재고찰

이창희(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최근 북한은 1970년대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성기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남한에게 추월당하는 등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외부의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북한식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주의적 경제 방식과 낮은 차원의 복지에 기초한 소비의 상대적 희생, 강한 조직력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대외관계를 활용한 공업 국가형 발전 노선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의한 경제위기와 1970년대 중반 대외 채무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였다. 인민생활은 낮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인해서 이전 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북한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여 계획에 기초한 시장 활용, 당-국가 체제의 재강화, 산업구조의 복원 등 ‘북한식 경제’를 재현하려 한다. 하지만 1970년대에 대한 호명은 당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였듯이,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해법을 가져오기 어렵다. 현재 시장의 활성화와 당-국가체제의 강화, 대외관계 개선의 지연과 산업구조의 본격적 재가동 시도 등이 서로 순항하기보다는 혼란과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주제어: 1970년대 북한 경제, 북한식 경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 공업국가

## 1. 들어가며

2013년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육성으로 신년사가 낭독되었다.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하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1970년대’를 강조하였다. 1970년대를 강조한 신년사는 2009년에도 있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걱정과 환희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나가던 1970년대처럼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당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를 강화하려고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된 ‘1970년대’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1970년대’에 대한 강조는 경제선동 및 건설에 대한 강조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부터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에 추월당하는 등 본격적인 정체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파악되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1970년대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sup>1)</sup> 이에 대한 근거를 김정은은 2014년 2월 26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에 전 인민적인 집단적혁신운동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귀중한 경험을 가

---

1) “1970년대의 시대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자,” 『로동신문』, 2012년 10월 25일 참조.

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던 1970년대에 우리는 미제의 대규모전쟁연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국청사에 일찍이 없었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폐지하고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과 싸우는 인민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강국, 문명국건설도 바로 1970년대처럼 사회주의위력, 집단주의위력을 발양시켜 본때있게 하자는 것입니다.<sup>2)</sup>

2014년 5월 9일자 『노동신문』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사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열의를 발양시키려면 1970년대와 같이 집중적이고도 강력한 경제선동공세를 해야 한다”며, “당사상 사업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최후승리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70년대 북한 경제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특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북한 당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970년대’를 강조하는 까닭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1970년대 북한 경제에 대한 선행 연구

양문수<sup>3)</sup> 등은 통일원의 발표에 의거하여 북한이 1971~1976년 연

---

2) “김정은 사상일꾼대회 연설 전문,” 『뉴포커스』, 2014년 2월 26일 참조.

3) 양문수,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평균 16%의 경제성장률로 1960년대 10.1%보다 상승했음을 인정하지만 제2차 7개년 계획기(1978~1984)에 4.7%로 하강하였고, 경제관리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계획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 경제성장은 서방과의 경제 관계 확대에 기초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 대외부채 문제로 디폴트(채무불이행) 국면에 직면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정치적 경제운영 문제와 맞물리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1960년대 형성된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라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상을 강조한 속도전, 계획보다 우선순위를 내세운 주석펀드 형성 등으로 문제 상황을 돌파하려 하였지만 계획경제의 모순을 심화시켜, 1970년대 중반부터 자재 공급의 차질 등이 발생했다. 결국 대외개방 시도는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1970년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1970년대 북한 경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 당국이 1970년대를 경제적 전성기로 강조하는 까닭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태섭<sup>4)</sup>과 정영철<sup>5)</sup> 등은 당시 경제위기에 대해서 1975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대중운동을 통한 돌파 전략이 비교적 수치상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74년 진행된 ‘70일 전투’는 북한식 대중운동의 일상적 제도화의 상징이었다. 전투적 대중 동원은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 및 조직사회주의 강화와 더불어 북한식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대중 동원은 외연적 성장

---

6권 1호(2003) 참조.

- 4)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6권 1호(2003) 참조.  
 5)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1호(2003) 참조.

전략의 극대화으로써 정치사상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의 정치논리화’를 노정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대되면서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경제위기 돌파 전략 위주의 분석은 경제적 해결 노력보다 지나치게 정치적 처방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이정철,<sup>6)</sup> 이항동<sup>7)</sup> 등은 1970년대 북한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1960년대 중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과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치로 인해서 형성된 ‘초중앙집권화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1970년대 ‘연합기업소’ 등 기업 분권과 ‘지방예산제’ 등 지방 분권, ‘독립채산제’ 등 가치법칙의 부분적 활용 등이 담긴 현실적 경제 정책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계획 목표를 비교적 달성하였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경제적 성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청년 중심의 3대혁명소조운동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의 관료화가 사라지지 않아서 북한 경제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생산관리정책, 금융,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의 변화는 합리성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노동정책 등은 사상에 기초한 대중 동원에 의존하면서 정책 간에 지속적인 불일치와 긴장이 발생하여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지점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197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를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로 극복하려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도 경제적 운영 방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1970년대 북한 경제를 재고찰하여 기간 선행 연구가 주목하지 못한

---

6)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04~132쪽 참조.

7) 이항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 『북한정치와 발전전략』(서울: 대영문화사, 1994), 459~502쪽 참조.

부분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에 입각하여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재분석하는 동시에 선행 연구들을 재종합하여 현재 북한 당국이 1970년대 경제를 불러오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 3. 1960년대 후반 조성된 북한 경제의 난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압박

1970년대 북한 경제의 특징을 관찰하려면 우선, 1960년대 말까지 북한 경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1970년대에 과거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이는 방식의 경제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 경제 연구자들은 1960년대 말 북한 경제의 단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그것은 바로 196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전개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폐해가 눈에 띄게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 월남전 등으로 초래된 안보적 위기 심리가 북한을 뒤덮은 상황에서 전쟁을 대비해 비축 물자를 쌓아두는 준전시적 방식의 경제운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중소분쟁의 심화로 인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 군수공업 중심의 자립경제 노선이 추구되었다.

따라서 첫째, 소규모 국가에서 제한된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국방 부문으로 투입하는 일이 발생하여 자원부족 현상이 만연해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 예산의 30% 이상이 국방비로 소진되었다. 둘째, 전방연쇄효과가 적은 군수산업으로의 집중적 자원 투입은 경제 규모

의 증대에 따른 산업적 연계의 확산을 정체시키는 병목 현상을 가져왔다. 셋째, 그럼에도 전쟁에 대비하는 경제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가치법칙의 활용마저 무시되는 경직된 경제운영방식이 전개되었다. 자원의 분배가 초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치가 취해졌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창조력을 발휘하여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결코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수정주의에 물젖은 일부 경제일꾼들이 가치법칙을 리용한다고 하면서 황해제철소에 나가 ‘가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로동자들이 일한 결과를 매일 돈으로 평가하는 놀음을 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해제철소 로동계급들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 가치법칙이고 ‘까마귀법칙’이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돈에 얽매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방법이며 그렇게 하여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sup>8)</sup>

우리는 계획지표가 만종이 아니라 몇 만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 계획화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 지난 시기 성들에서 하던 것을 국가 계획위원회에서 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큰 수자를 몇 개 묶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주의경제를 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큰 것과 함께 작은 것들까지 옹계 계획화하는데 있습니다. 지표가 많아서 하루 이틀

---

8)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1967.6.13),”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299쪽.

에 못하면 한두 달이나 한 해가 걸려서라도 세워야 하며 사람이 적어서 하기 힘들면 계획일군을 늘여서라도 세부계획화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공장의 실정을 잘 아는 오랜 기술자를 작은 공장에서는 한사람, 큰 공장에서는 두서너 사람씩 올려와도 될 것입니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70년 제5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는 완충기까지 더해진 1차 7개년 계획기간(1961~1970)에 공업생산액이 3.7배 증가하였다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을 선포하였다. 당시 북한이 이룬 경제적 성과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공업 우선 노선에 의해 공업적 생산구조가 세워졌다. 사실 후진국에서 공업적 생산구조를 갖기란 쉽지 않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북한 지역에 존재한 중화학공업 설비와 한국전쟁 이후 소련, 동구권의 원조 및 기술지원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공업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생산기술의 향상만큼은 아니지만 생산성의 부분적 고양을 가져오는 경영기술의 획득이다.<sup>10)</sup>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은 비로소 잦은 이직과 낮은 숙련에서 벗어나 노동 조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 등을 통해 기술적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정규적인 노동규율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일례로 천리마 대안전기 공장에서는 작업반 매일 총화, 순별 및 월간 직장 내부채산제 실행

---

9)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9.23),” 『김일성저작집』, 제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65쪽.

10)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김희정 옮김(서울: 부키, 2014), 240쪽 참조.



총화, 매주 작업반장 연합회의, 직장 담당 성원들의 매일 총화회의, 직장 및 각 부서들에서의 주간 사업 총화, 매주 공장참모회의 및 간부 협의회, 월별·분기별 증산 경쟁 총화회의의 등 회의체계를 확립하고 엄격히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다.<sup>11)</sup>

이러한 성과들은 북한을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변모시킨 장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1956년 반종파투쟁에 이어서 1967년 5월 갑산파 사건과 1968년 10월 군부강경파 사건이 발생하였다.<sup>12)</sup> ‘수령제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수정주의적인 갑산파와 군사모험주의적인 군부강경파를 차례로 숙청한 것이다. 하지만

11) 김석원·박원일, 『인민경제 계획하에서 균중로선의 관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61쪽;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현대사 1』(서울: 한울, 2004), 411~412쪽 재인용.

12) “거의 10년 후인 1966~69년 기간에 북한 지도부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뿐만 아니라 변화된 국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 번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이론논쟁 및 정책분쟁에 휘말렸다. 경공업과 소비공업의 발전을 우선하는 1961~65년 기간의 합리적인 발전 전략이 1966년에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하면서 국방강화 및 중공업 확대정책으로 뒤바뀌었다. …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온건파는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길’을 계속하는 정책의 채택을 주장했으며, 반면 강경파는 중공업 발전 특히, 국방 강화를 지원하는 기계공업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강력히 추구했다. 온건파 지도자는 정치국원인 박금철(조선노동당 조직부장이며 김일성의 오랜 동료)이었다. 그들은 선전선동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일원인 김도만과 비서국의 일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인 박용국의 지원을 받았다. … 강경 노선파는 김창봉(민족보위상), 김광협(전민족보위상 겸 부수상)과 같은 군부 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이들 두 사람은 정치국의 위원이었다. 그들은 최광(북조선 인민군 총참모장), 허봉학(북조선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정치국의 후보위원이었다. … 1966~69년 시기의 이들 두 파벌 사이의 권력투쟁의 치열성과 정책갈등의 심화는 그 뒤 숙청과 정책 노선의 변경에 반영되었다.”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입문』(서울: 한울, 1987), 104~105쪽.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무리한 실행에서 중공업 우선 노선 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제기되면서 계획의 현실화를 주장한 갑산파는 경제적 수정주의로, 국방공업을 강조하며 중공업 중심의 노선을 강조한 군부강경파는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낡은 발전지체 현상에 대한 문책으로 숙청되었다.<sup>13)</sup>

또한 대외적으로 그동안 중공업과 원료 부문의 개발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국력을 집중시켰던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1950년대의 연간 10.6%에서 1960년대 8.8%로 고도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sup>14)</sup> 이에 대해 동구권은 자립경제의 포기과 국제분업체계에 대한 지지, 시장경제 등을 도입하는 개혁사회주의로의 변화 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경제-국방 병진 노선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온 북한의 초중앙집권화된 경제 운영에 대해 충분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고민은 증폭되었다. 어떠한 경제적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 규모 및 인구의 증대 추세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 4. 1970년대 북한의 경제적 대응과 2차례 위기 돌파: 북한식 경제의 태동

1970년대 북한은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으로 조성된

---

1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5), 428~433쪽 참조.

14) 최성,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서울: 학민사, 1990), 147~148쪽.

경제위기와 1970년대 중반 대외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즉 두 차례의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북한은 자립적 발전 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공업화를 위한 자본 축적,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따른 전시물자 조성, 높은 인구 증가율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필요로 하였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국방력도 확보하고, 자본 축적을 향상시켜 공업의 규모를 유지·확대해 추격 발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각 산업별로 높은 성장률을 동시에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경제보다 폐쇄적인 계획경제의 특성상 전체 산업구조에 차질이 빚어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경제의 균형을 꾀하는 적정 성장률<sup>15)</sup>을 고려하기보다는 발전 속도 중심의 높은 경제성장률 재달성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

---

15) “공급제한산업(필자 주: 중화학공업 등)은 기술적·조직적 이유 때문에 장기성장률에 정점을 갖는다. 그래서 아무리 투자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일정을 이상으로 산출을 증가시킬 수 없는 산업이다. … 공급제한산업 성장률의 정점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조직적 요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자연자원의 성장률의 제약, 신기술 습득에 필요한 시간, 특정 산업에서의 노동력 모집의 곤란, 숙련공훈련에서 적절한 향상의 곤란, 고숙련·다경험의 기술경영관리층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 칼레츠키(Michal Kalecki)는 단기소비 희생에 당연시하고 성장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성장 방식을 비판하였다. 이는 당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저항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정책 당국이 개인들의 현재 소비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단기소비희생과 장기소비이득을 비교하여 적정 성장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 성장방식의 근거인 펠드만(Feldman) 성장 이론이 간과했던 문제들을 검토했다. 즉 현실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 투입물의 수입수요 증가, 특정 부분의 병목 현상(bootleneck)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① 자원 및 특정 부분의 병목 현상과 ② 성장률 제고에 따른 소비 제약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의 문제 등은 사회주의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칼레츠키 성장 이론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23~24쪽 참조.

고자 하였다. 대응 과정에서 북한식 경제의 특성이 나타났고, 낮은 수준이지만 인민생활의 향상을 실현하였다. 북한식 경제의 특성은 북한 특유의 조직적 사회주의체제와 절충주의적 경제 노선, 그리고 대외 관계를 활용한 공업화 발전 전략의 지속성 등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은 실현되지 않았다.

### 1) 196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북한 당국은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압박으로부터 제기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해 이미 1969년부터 대응정책을 제시하였다. 1969년 3월 김일성은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가치법칙을 무시하는 기존의 고전적 사회주의와 동구에서 불어오는 시장 활용 등의 ‘개혁사회주의’ 경향에 대해 절충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경제적 좌우 편향을 경계한다며 가치법칙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을 가격으로 표시하는 가치법칙의 형태적 활용뿐만 아니라, 시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가격정책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연성예산제약 등 자원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현상을 막고자 하였다. 이는 물질적 관심 등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면서 1973년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sup>16)</sup>

바로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하에서 비록 다 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  
 이긴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래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할 것을 요구합  
 니다. ……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문제로 될 것이기에 간혹 계획이 잘못  
 되어도 실지 공급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별  
 씌 20년 이상이나 계획경제를 실시하여왔으며 계획을 객관적으로 세우  
 라고 계속 강조하여오지만 아직도 계획화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재, 원료의 공급계획이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계획에서 빠뜨리  
 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가서 걸려야 하겠습니까? 상사에 가서  
 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상사를 거쳐 자재, 원료를 팔고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충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 정치경제학  
 교과서에도 농민시장에 대하여 잘 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는  
 가 하면 농민시장은 공동경리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고 농민들의 소부르  
 쵸이사상, 리기주의를 길러준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사  
 회에서 농민시장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 때에  
 가서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똑똑히 써여있지 않습니다. 사  
 회주의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  
 으며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sup>17)</sup>

또한 1969년부터 ‘새로운 계획화체계’가 강조되었다. 이는 경제-국  
 방 병진 노선 당시 도입된 초중앙집권적인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계획 지표를 위와 아래가 분담하도록 하였

16)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126쪽 참조.

17)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1969.3.1),” 『김일성저작  
 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61~467쪽.

다. 이는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의 대명사인 ‘통제수자’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수자’를 도입하는 등 비효율적인 계획경제의 폐해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키고 계획을 현실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계획화체계에서 인민경제계획사업은 먼저 공장, 기업소들에서 예비수자를 세우는것 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서 예비수자라는 것을 새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화 사업에서 생산자들의 민주주의를 더 잘 발양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수자는 계획초안도 아니고 통제수자도 아니며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자들과 널리 토의하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에 기초하여 생산을 늘일 가능성을 모두 따져 지구계획위원회와 성, 관리국에 제기하는 수자입니다. 예비수자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자들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계획화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를 없애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sup>18)</sup>

이때부터 계획의 세부화란 중앙이 세부적인 경제 활동을 직접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 기관은 내부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외부적 계획 지표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세부적인 계획의 대부분은 생산자를 포함한 하부의 기업소에서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계획기관의 성원을 하부에 파견하는 등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아래 기업소에서 스스로 작성하는 내부 계획 지표에 대해서 중앙의 계획기관이 선정한 기준에 의

---

18) 김일성, “일원화계획화체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1969.7.2),” 『김일성 저작집』, 제2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20쪽.

거하여 통제하였다.<sup>19)</sup> 중앙에 속하는 3급기업소(보통 1,000~2,000명 고용) 이상의 공장 단위에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속하는 국가계획부를 설치하여 아래 단위의 계획 작성이 위 단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1973년에 강조된 국가주석 예비(주석фон드), 정무원 예비의 마련을 통해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완충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sup>20)</sup>

부분적인 경제관리의 개선은 기업 분권화와 지방분권화로 발전했다. 1973년 일관생산체제를 의미하는 연합기업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앞서 1971년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후과인 국방공업 중심의 초중앙집권적 경제를 극복하고자, 군수산업에 대한 분권화 차원에서 ‘제2경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sup>21)</sup> 또한 1973년 지방기업소의 수입을 해당 지방에서 먼저 사용하는 지방예산제가 실시되었다.

연합기업소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 밑에 기업소의 통일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자원의 분배와 조절을 실시하며 모든 생산

19) 이석, “경제제도: 변화와 지속,” 『북한체제의 이해』(서울: 명인문화사, 2009), 42~44쪽 참조.

20) “국가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총자재фон드 가운데서 국가주석예비와 정무원예비를 내놓은 다음 나머지 자재를 가지고 생산계획과 자재공급계획을 맞물려야 합니다. 국가주석예비는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주석예비로는 강재, 세멘트, 자동차, 트랙토르를 비롯한 중요한 설비와 자재들만 내놓으면 됩니다. 정무원예비는 증산계획과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쓰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재를 계획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정무원예비를 마련하고 그것을 옹계 리용하면 자재 때문에 국가계획이 튀거나 생산에서 큰 파동성이 생기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3.2.1),” 『김일성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32~133쪽.

21)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329쪽 참조.

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휘한다. 그것은 산하기업소들의 생산활동 결과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생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책임진다. …… 소속과 지역에 관계없이 생산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련쇄된 기업소들을 하나의 생산기술적 유기체로 묶은 련합기업소는 ……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 ……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협동생산규률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여도 필요한 원료, 연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받지 못하면 생산을 제대로 밀고 나갈 수 없으며 기업관리의 계획성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없다. 련합기업소는 자신이 원료, 연료 생산기지를 직접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통일적인 지령체계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 연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sup>22)</sup>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매개 군과 도들에서 지방예산제를 실시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 모든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는 매개 도마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충하며 나머지 자금을 국가에 바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예산의 축적금을 전적으로 확대재생산에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 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sup>23)</sup>

---

22) 최진성,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근로자』, 제12호 392권(1974), 40~42쪽.



둘째, 북한은 서구의 자본까지 도입하며 중공업 우선 노선에 따른 기술적 병목 현상 등을 해결하려는 개방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 당국의 개방정책은 기간 양적 발전을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971~1976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들어온 차관은 약 12억 42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소련에서 도입된 차관 9억 600만 달러를 상회하였다.<sup>24)</sup> 물론 1960년대 북한의 전체 차관 도입액이 약 9억 달러였기 때문에, 당시 서방뿐만 아니라 소련에서 제공한 차관도 증대되었다.

북한은 서방 차관 도입을 통해 기술 수준이 사회주의국가보다 우위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기계, 플랜트 등 설비 도입을 시도하였다. 서구 자본을 도입한 대표적 사례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였다.<sup>25)</sup> 당시 세계적 추세가 석탄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효율성이 높은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북한도 선진적인 기술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외채까지 빌려서 석유 중심의 설비를 받아들였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기계, 자동차, 선박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석탄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이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공통적 문제인 수송 부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증가되었다. 따라서 많은 석탄매장량에 기초하여 자력갱생의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던 북한에서도 1973~1977년 석유 소비가 연평균 10% 이상 크게 증가되는 결과가 빚어졌다.<sup>26)</sup>

23) 리호혁,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근로자』, 제6호 398권(1975), 53쪽.

24) 같은 기간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160만 달러를 북한에게 제공하였다.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1998), 27쪽 참조.

25) 『북한의 산업 2010』(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373쪽.

또한 북한은 대외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권과의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1975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 및 OECD와의 수출이 전체의 20%, 수입이 전체의 41.1%까지 차지하였다.<sup>27)</sup> 당시 소련과의 수출·수입은 각각 26.0%, 22.4%였다. 1970년부터 무역부의 허가 아래 지방기업소들을 포함한 모든 기업소에서 수출입의 주문을 받게 하였고, 1975년 한두 가지의 특정 품목만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전문화되어 있던 무역상사들이 모든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여 서로 경쟁하였다.<sup>28)</sup>

셋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서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후진국에서는 높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성장의 문제로 인해 자원이 부족해져 경제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북한도 높은 인구 성장률에 의한 소비의 확대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의 지표가 되는 1인당 실질소득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인구 발표를 볼 때 1946년 약 925만 명에서 월남과 전쟁 피해 등으로 1953년 약 849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1956년 약 935만 명, 1960년 약 1,078만 명, 1970년 약 1,461만 명으로 1960년 인구에 비해 1970년 인구는 35.5% 증대되었다. 1960년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3.08%였다.<sup>29)</sup>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에 걸맞은 높은 경제성장이 북한에 요구되었다.

---

26)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20~322쪽.

27) 양문수, 위의 책, 256~257쪽.

28)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계의 전개,” 『통일논총』, 제5권 1호(1985), 159쪽.

29)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22~23쪽 참조.

<표 1> 197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sup>30)</sup>

연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경제성장률	5.8	31.0	15.9	16.0	18.9	17.1	20.0	10.9	-4.0	16.9	14.9	1.7

자료: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142쪽 참조

하지만 제5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일 부수상의 보고에 따르면 1960년대 1차 7개년계획에서 예상했던 공업총생산 연 18.1%에 미달하는

30) <표 2>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 경제성장률 관련 자료 (단위: %)

구분	북한(NMP)	한국 추정	미국 CIA	황의각	Kim, Kim and Lee
1961~1965	10.0(61~64)	10.1	9.8(60~65)	9.4	3.3(60~65)
1966~1970	5.4(65~70)		5.5(65~70)	5.8(66~69)	3.3(65~70)
1971~1975	17.2(71~74)	16.0(71~76)	10.9(70~75)	19.8(70~75)	4.6(70~75)
1976~1980	8.8(78~84)	4.7(78~84)	4.1(75~80)	8.1	2.2(75~80)

주 1: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 총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협의적인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농업생산이나 생필품 생산 등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가감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디지털북한백과사전』 참조).

주 2: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조선중앙년감』, 신년사 등)에 따른 것이고, 한국의 추정은 UN 자료에 기초하여 국토통일원에서 발표한 것이며, CIA의 수치는 북한에 대한 구매력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내총생산에서 유도된 것이고, 황의각의 통계는 북한의 공식 자료에 남한의 국토통일원 추정치(1946~1965년)를 감안하여 1989년까지 추정 계산한 것에 기초한 것이며, Kim, Kim and Lee는 북한 경제성장률의 과대 포장된 수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픈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추정한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 경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통한 비판적 관점에서 북한의 공식 자료를 활용하고자 그것을 바탕으로 1970년대 매년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황의각의 발표를 참조한다.

자료: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4~29쪽; 권순필·김서영·심규호, “북한통계 현황 분석,”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연구 및 통계를 이용한 현황 분석』(대전: 통계개발원, 2008), 16~22쪽;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128~143쪽;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35, No.3(2007), p.572.

연 12.8%를 기록하였다.<sup>31)</sup> 1960년대 중·후반 북한 경제성장률의 각 추정치는 3~5%대로 침체되었으며, 연 3%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1인당 실질소득성장률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 인구의 확대에 의한 공업 부문에 대한 공급 제약이라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은 노동력이 부족함에도 1972년부터 ‘산아제한’이라는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력 부족은 1970년에 주창된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해소, 여성들의 가사 부담 해소라는 ‘3대 기술혁명’을 강조하면서, 가정으로부터의 여성노동력 배출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1980년 북한의 인구는 약 1,729만 명으로 1970년 인구보다 18% 증가하였고 1970년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7%로 둔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다시 발전하였다. 1971~1976년 6개년계획 동안 많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외경제관계의 호전 등으로 자원 투입이 증가되었고, 인구가 억제되는 동시에,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동시 발전에 따른 인민소비품의 증대로 인해 인민생활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공업총생산이 16.3%, 국민소득이 1970년의 1.7배로 증대하여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에 따라 소매상품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였다.<sup>32)</sup>

---

31) “1960년대 후반, 특히 1966년과 1969년 북한의 공업총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2.8%, -1.3%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감소하였다. 그 결과 3년간 연장된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2.8%에 머물게 하였다. 공업총생산의 성장 둔화는 경제침체를 가져와 북한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최수영,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5), 22쪽.

32) 이항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 498~499쪽.

하지만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조성된 경제위기는 벗어났지만 1977년 외채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경제위기가 재조성되었다. 1970년대 초·중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후반 높은 경제성장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높은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북한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경제위기를 의미하였다.

## 2) 197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재조성과 대응

1970년대 중반 북한은 오일쇼크와 주요 수출품인 비철금속가격 폭락으로 인한 결제외화 부족 등 대외경제관계의 제약으로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진행되었다. 플랜트 수입에 대한 대금 독촉 등을 차관 도입으로 해결하려다가 서방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결국 1974년부터 대외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어 끝내 1976년 외채 규모 20~24억 달러 규모에서 디폴트 상태가 된 것이다.<sup>33)</sup> 이로 인해 설비 개선 및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황의각의 추정에 의하면 1977년 -4.0%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경제관리 개선정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존 경직된 경제관리방식의 관성적 측면이 여전히 남아 변화된 경제운영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33)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협상이 1976년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1987년 서방은행 측으로부터 채무불이행국가로 규정되었다.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221쪽 참조.

<표 3> 지방예산 수입의 증양예산 원조 추이

구분	1973 / 1974	1974 / 1975	1975 / 1976	1976 / 1977	1977 / 1978
예산 수입(%)	142.6	121.0	109.7	124.4	201.8
수입 초과(만 원)	3억 2,049	4억 1,700	3억 6,035	5억 4,813*	11억 9,900

\* 하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1977년에 우리나라의 지방들에서는 10억 원을 국가에 들여놓았으며 지난해에는 11억 9,900여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국가에 들여놓았다.” 김관현, “지방예산제와 일군들의 창발성,” 『근로자』, 8호(1979), 50쪽.  
 자료: 김일한, “북한 지방공업(1947~1975)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64쪽; 『조선중앙년감』(1975), 353쪽; 『조선중앙년감』(1976), 333쪽; 『조선중앙년감』(1978), 292쪽; 『조선중앙년감』(1979), 275쪽.

후계체제 구축과 맞물린 충성 경쟁 속에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지방예산제가 크게 활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예산의 초과 수입 명목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높아졌다.

1970년대 중반 다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이 조성되자, 북한 당국은 1960년대 말에 조성된 위기에 대한 대응정책과 더불어 다른 정책들을 강화 또는 실행하였다. 북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자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대응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우선 정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김정일 중심의 후계체제에 기초하여 당적 지도를 통한 전투적 대중 동원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 70일 전투였다. 이는 이미 1971년에 실시한 ‘100일 전투’와 유사한 방식이었으며, ‘100일 전투’도 1978년, 198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투적 대중 동원에는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의 선봉대격인 3대혁명소조가 앞장섰다. 1973년 2월에 만들어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3대혁명소조는 대부분 노동당 간부,

<표 4> 1970년대 예산 지출의 구성

(단위: 만 원)

연도	총액		인민경제비		군사비		사회문화비		관리비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1971	630,168	100.0	302,334	48.0	195,982	31.1	121,139	19.2	10,713	1.7
1972	738,861	100.0	423,267	57.3	125,606	17.0	176,589	23.9	13,399	1.8
1973	831,391	100.0	490,458	59.0	128,188	15.4	197,780	23.8	14,965	1.8
1974	967,219	100.0	566,955	58.6	155,723	16.1	227,130	23.5	17,411	1.8
1975	1,136,748	100.0	669,007	58.9	186,427	16.4	261,200	23.0	20,114	1.7
1976	1,232,550	100.0	721,134	58.5	205,836	16.7	292,022	23.7	13,558	1.1
1977	1,334,920	100.0	778,824	58.3	209,582	15.7	321,224	24.1	25,290	1.9
1978	1,474,360	100.0	861,379	58.4	324,423	15.9	344,673	23.4	33,855	2.3
1979	1,697,260	100.0	1,025,902	60.4	256,286	15.1	379,485	22.4	35,587	2.1

주: 참고로 1960년대 사회문화비 비중은 1961년 21.3%, 1962년 22.5%, 1963년 21.5%, 1964년 20.6%, 1965년 19.0%, 1966년 17.3%, 1967년 17.5%, 1968년 17.2%, 1969년 19.7%, 1970년 19.7%였다. 이러한 예산 구성은 연도별 세출 총액 및 증가율과 부문별 세출 예산 구성비에 의거해 산출하였다.

자료: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서울: 대영문화사, 1994), 455~497쪽 참조.

대학졸업생, 공장 기술자, 과학자 등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다. 김정일은 소조원들을 공장, 농촌, 학교, 행정기관 등으로 보내서 세대교체를 진행하였고, 자신으로의 후계체제를 구축하였다.

물론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적 동원만을 목표로했던 것은 아니었다. 3대혁명소조원의 구성과 1973년 ‘11년 의무교육제’의 채택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술적 발전을 꾀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동원이 강조되면서 기술적 성장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둘째로 경제위기에 따른 자원의 제약 상황에서 낮은 차원의 소비와

그를 보완하는 복지를 진행하였다. 외채위기로 공급이 제약됨에 따라 소비를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동원되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문화비를 늘려서 무상교육 등의 복지를 실행하여 실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은 외채위기 상황에서 독자적 발전 전략을 포기하면서 외채 도입 증대와 수출정책으로 소비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긴축재정을 통해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sup>34)</sup> 하지만 북한은 자립경제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채무불이

---

34) 동일한 사회주의국가 폴란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폴란드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거의 수반하지 않은 채, 연평균 10% 이상에 달하는 고도성장 정책을 계속하고, 실질임금도 연평균 7% 상승했다. 육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1년 51kg에서 75년에는 70kg로 급증했다(영국은 70년 50.4kg에서 75년 46.2kg으로 떨어졌다). 당연히 수급의 불균형은 극단으로 치닫고 자유시장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농민은 정부에 식량을 공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70년의 식량가격 인상 시도가 발트해 지방의 폭동으로 불가능해지고, 고무우카(Gomulka)가 실각해 정치적 리더십이 땅에 떨어진 73년부터 폴란드는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최성,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268쪽; “폴란드는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 동안 투자는 130% 증가했고, 명목임금은 60% 이상 올랐으며, 이는 서방의 막대한 차관으로 지탱되었다. 결국 1976년이 되자 불가피하게 진로를 바꾸어야 했다.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졌는데, 특히 육류에서는 더 이상 보조금을 통한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 보조금이 국가예산에서 큰 부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에레크(Edward Gierek)가 1976년 여름 물가를 인상하려 하자 이전보다 더 큰 시위가 일어났고, 기에레크는 이 조치를 황급히 철회하였다. 계속 늘어가는 채무, 식료품 부족, 많은 부문에서의 불균형들로 이후 4년 동안은 폴란드가 재앙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시급했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폴란드는 엄청난 곡물 수입국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국제수지 상황은 악화되었다. 1971~1975년의 인위적인 호황 속에서 고양된 기대감은 슬프게 허물어져버렸다. 1980년 식료품 가격을 인상하라는 시도가 다시 이루어지자 정부는 분열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재건과 극적인 경제개혁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 속에서 ‘연대’노조가 강성해졌고, 결국 기에레크는 사임하고 카니아(Kania)와 야루젤스키(Jaruzelski)가 뒤를 이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경제 파탄



행을 선언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정의 확대를 통해 위축되는 소비를 보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당시 배급제의 강화는 물자가 풍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sup>35)</sup> 경제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지만, 국가적 공급을 통해 소비의 위축 정도를 최대한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중·후반 국영상점에서 생필품 구입의 수량이 제한되는 가운데 실시된 ‘공급카드’의 부활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sup>36)</sup>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북한 당국은 1978년 지방예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sup>37)</sup> 지방재정체계에 관한 특별법규를 채택하여 소비재 증산, 재산성 향상, 상여금 사용, 예산과 결산제도 등에 대한 지방기업소 규정을 강화하였다.<sup>38)</sup> 이를 통해 북한의 지방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중앙예산 비중이 증대되었다. 또한 1979년 화폐개혁도 실시하였다. 신화폐와의 1:1 교환에서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지

---

을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파업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외환 고갈, 식량 부족, 공급 정체 때문이었다.” 알렉 노브(Alec Nove),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대안체제연구회 옮김(서울: 백의, 2001), 302~303쪽.

35) “... 우리나라에서 쌀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에 요긴한 물건에 대하여 실시되는 공급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실시되는 공급제는 물건이 많아서 하는 공급제는 아니며 물건이 많지 못한 조건에서 하는 공급제이다.”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96쪽.

36) “나아가 70년대 중반 혹은 후반부터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에 대한 수량 제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개인이 국영 상점에서 식료품과 공산품을 구입하는데 대해 수량 제한이 없는 이른바 자유 판매였으나 이 시기에 이른바 ‘공급카드’가 등장하면서 상당수 생필품의 구입이 품목별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의 배급제로 바뀌었다.” 양문수,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57쪽.

37) 김관현, “지방예산제와 일군들의 창발성,” 『근로자』, 8호(1979), 51~53쪽.

38) 정민수, 『북한의 이해』(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189쪽.

<표 5> 1973년 이후 국가예산에서 지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지방예산제 정식화 이후의 지방예산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중앙예산	83.3	79.5	79.9	79.8	73.2	84.9	85.1	85.6
지방예산	16.7	20.5	20.1	20.2	26.8	15.1	14.9	14.4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86), 163~165쪽.

만 기관·기업소·협동단체는 구화폐를 모두 은행에 입금시키고, 필요한 금액만큼을 신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기업소들의 유희자금을 흡수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셋째는 그동안 축적된 중공업 중심의 산업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차 원료에서 가공된 시멘트, 선철, 강철판, 아연 등 2차 반제품 수출, 제3세계에 대한 기계 수출 등으로 대외무역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81년까지 비록 소련 등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 국한된 수출이었지만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산업화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39)</sup>

이러한 대외무역의 개선에 1970년대 후반 비철금속가격의 재인상도 한 몫 하여 무역 규모도 증대되었다.<sup>40)</sup> 1978년 이후 대기업소는 그들의 지사 형식으로 한두 개의 무역상사를 설립하여 해당 기업소의 수출입을 담당하게 하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였다. 무역은행도 ‘조선금강은행’, ‘조선대성은행’ 등 두 곳이 신설되었고, 특정 무역상사

39)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78~79쪽.

40)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221쪽 참조.

<표 6> 1970년대 북한의 화학비료와 알곡 생산량 (단위: 천 톤)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화학비료	1,500	-	-	-	-	3,000 <sup>1</sup>	-	3,000	3,690	4,169
알곡생산량	-	-	-	5,343 <sup>2</sup>	7,000	7,700	8,000	8,500	7,870	9,000
FAO 추정						7,035				8,850 <sup>3</sup>
통일원 추정						4,953	5,032	5,029	4,988	5,177

주 1: 화학비료 생산량이 5년 동안 발표되지 않다가 1975년 2배로 발표되고, 1977년 생산량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건설처럼 화학비료공장의 설비가 확대·정비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 2: 1973년 알곡생산량이 534만 톤으로 몇 년 만에 발표되었지만 1968년 알곡생산 567만 톤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화학비료 생산의 증대가 알곡생산량의 향상에 기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필자는 내재적 접근에 따라 북한의 알곡생산량 발표를 중심으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 3: 1980년 FAO 추정치를 사용했다.

자료: 필자 제작상;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96), 240, 403~404쪽;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5쪽 참조.

들을 나누어 취급하였다.<sup>41)</sup> 1979년 북한 당국의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매우 넓어지고 경제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커진 오늘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이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물론,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우호 관계인 소련의 경제협조도 크게

41)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계의 전개,” 160쪽.

도움이 되었다. 소련은 1976~1980년 북한과의 물품거래를 40% 늘리고, 물품공급의 범위도 확대하였다.<sup>42)</sup> 이러한 흐름은 1980년 소련과의 수출, 수입이 각각 26.6%, 25.9%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5년 각각 37.7%, 41.3%로 확대되어 북한의 소련의존도를 매우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 경제의 커다란 취약성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 소련과의 교역 확대는 당시 북한의 중공업 중심 산업구조가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화학공업에 기초한 화학비료의 대량 투입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sup>43)</sup>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생산된 화학비료의 투입을 바탕으로 알곡생산이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경제위기에서도 커다란 식량난의 발생 없이 경제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외채위기를 통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다른 후진국과 달리 북한은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42)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65쪽 참조.

43) “북한에서 화학공업 부문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공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은 경지면적의 제한성 때문에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량의 화학비료에 의존하였다.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1970년대 중반부터 크게 성장하였는데 ... 이 시기에 집약농사를 골자로 하는 주체농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집약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화학비료가 대량 투입되었고, 경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된 이모작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더욱 증가시켰다. 하지만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토양의 산성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농업생산력을 저하시키고 다시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47호(2007), 256쪽.

하고 커다란 물가상승이나 소비하락이 없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커다란 경제적 위기가 발생되지 않았고, 비교적 경제생활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는 외채위기를 겪은 후진국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하게 평가해봐야 될 지점이다. 1970년대 북한은 일반적인 후진국들의 혼란스런 국가조직 수준과 달리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조직체계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었다. 또한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주의공업화로 인해 농업부터 공업까지 일관된 산업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그나마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공업화된 산업구조의 원활한 가동은 1970년대 초·중반 서방과의 경제교류나 소련 등 사회주의적 우호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5. 1970년대 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 경제적 전성기 vs 경제위기의 지연

북한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는 대부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을 북한 경제의 황금기라고 칭했다.<sup>44)</sup>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1970년대를 ‘조선노동당시대의 대전성기’라고 평가한다. 북한은 1948~1949년에도 당시 경제를 ‘황금기’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또한 1948년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등 실제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목적인 인민생활 향상의

---

44) “생기 잃은 주체의 나라,” 『한겨레21』, 1999년 12월 9일 참조.

관점에서 1960년대에는 후반기 춘공기가 재조성되는 등 인민생활의 어려움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sup>45)</sup> 1970년대에는 실제 인민생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를 경제적 전성기라고 보는 것이다.<sup>46)</sup>

따라서 북한의 관점에서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북한의 ‘경제적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 당국이 1970년대 국가조직체계와 공업화된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제관리와 대외 관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위기가 파국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고, 과거보다 조금이나마 인민생활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1970년대 북한 경제의 특징은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의 시도였다. 북한 당국이 경험 속에서 축적된 자신들의 경제 방식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관성으로 인해 제도화에는 실패하였다.

1960년대 대내외적으로 개혁사회주의의 등장과 중공업 우선 노선에 대한 재논쟁 속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

45) 통일연구원,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서울: 선인, 2006), 164~166쪽.

46) “조선로동당은 새로운 경제 과업을 설정하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100일전투’ 등을 조직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전후 이래 지속된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민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이 많이 향상되었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4년에는 세금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공업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하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1975년부터는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일찍이 시행된 무상치료제와 함께 사회보장제도가 기틀을 잡았다. 실제로 무상의무교육과 무상치료제는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였으며,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기술자와 전문가 수는 100만 명에 달할 만큼 고급 인제도 확충되었다. 이러한 성장을 거치면서 1979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20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4), 294~295쪽.

로 등장하였다. 1975년에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리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 등이 출간되었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확립한 북한 경제건설의 총 노선인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에 대한 사업체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등을 결합하여 주체사상연구소에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경제관리운영방식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재상사를 시장 공간처럼 활용하며 계획의 보충적 역할을 하게 하였던, 1969년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와 1973년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에 나타난 김일성의 문제의식도 크게 결합되었다. 이는 1960년대 수익성을 강조하는 소련의 리베르만식 물질적 개혁 노선과 사상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하면서 좌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절충주의적인 북한식 경제의 특징으로 자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정식화는 가치법칙의 제한적 활용과 기업의 분권화 및 지방의 분권화 등 사회주의 과도기 ‘계획과 시장’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만일 기업소에 돈이 없으면 이미 공급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재는 자재상사가 사가지고 있다가 그 기업소에 돈이 있을 때에 팔아주든가 돈이 있는 다른 기업소에 팔아주어야 합니다. 자재상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업하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장에 자재를 많이 주어 쌓아두게 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고 생산을 더할 수 있는 공장에서 자재가 모자라 생산을 더하지 못하는 현상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sup>47)</sup>

---

47)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3.2.1),” 131쪽.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옳게 리용하는 것은 국영기업소들로 하여금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생산수단들에 대하여 값을 엄격히 따지며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자체로 검토하고 생산수단을 공급받도록 한다. 이것은 매개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생산수단을 공급받는데서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받아오며 그 값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상을 없애고 불필요한 생산수단을 사들여서 원료, 자재, 설비들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어떤 자재를 너무 많이 사오면 다른 자재를 사올 수 없고 또 자재를 낭비하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자재를 귀중히 여기고 더 잘 보관관리하게 하며 자재리용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sup>48)</sup>

세 번째 1970년대 북한 경제의 특징은 대외경제관계와 조직된 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서의 위기 대응이다. 1970년대는 북한이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으로 공업국가가 된 상황에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였던 상징적 시기이다. 물론 1970년 북한은 중요 공업제품의 1인당 생산량에서 선진국의 수준을 일부 따라잡았다며 ‘발전된 공업국가’라며 지나치게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비중이 1956년 34%에서 1969년 74%로 높아져 더 이상 과거의 농업국가가 아니었다.<sup>49)</sup> 북한은 일정한 산업적 규모와 조직된 노동력을 지닌 공업국가로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조직된 노동력의 운영에는 ‘사회주의헌법’ 제정과 ‘후

---

48)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20쪽.

49)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220쪽.



계체제’ 강화로 대표되는 북한 당·국가 체제의 정비와 강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공업국가로서의 위기 극복 방식에는 대외경제관계도 크게 활용되었다. 미흡하지만 성장된 산업 규모에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대외무역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와의 협력이나 소련 등의 우호적 국제 환경을 시기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서구 자본을 통한 중화학 공업의 재정비를 통해 농업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위기에도 식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북한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의도에 대항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sup>50)</sup>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의 ‘필수적 요구’이며, ‘필연적’<sup>51)</sup> 흐름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연료와 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이와 함께 모자라거나 적게 요구되거나 자체로 당장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촉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방도로

---

50) “경제적으로 뒤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지배속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다시금 들췄우려 하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의 간판 밑에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억제하면서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리론』, 117쪽.

51) 위의 책, 120쪽.

된다. …… 우리나라는 또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경제적 관계를 맺고 서로 필요한 생산물들을 유무상통하고 있다.<sup>52)</sup>

북한 당국의 관점에서 1970년대 북한 경제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북한 경제의 전성기를 실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나타는 절충주의적 경제 노선, 조직적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대외 관계를 활용한 공업화 발전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북한식 경제’의 특성으로 자리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전성기를 실현하였다는 북한식 경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에 이어서 1970년대 중반에 다시 경제위기를 맞이한 1970년대 북한 경제는 ‘경제위기의 지연 과정’에 불과하였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강세를 나타내는데, 1978년부터 시작된 ‘2차 7개년 계획(1978~1984)’의 실행 과정에서 발표되는 ‘1980년대의 10대 경제전망목표’<sup>53)</sup>과 같이 좀처럼 계획경제의 목표가 하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자기 기업만을 중심으로 계획을 달성하고자 물자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현상이 빈번해진다. 이는 각종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실제 물자 생산량과 무관한 만성적인 ‘부족의 경제’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생산력을 자본주의보다 높게 발전시켜야 할 사회주의 북한은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로 전락하고, 저

---

52) 최중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232~238쪽.

53)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80년대의 10대 경제전망목표’는 전력 1,000억 kW, 석탄 1억 2,000만, 강철 1,500만, 비철금속 150만, 화학비료 700만, 시멘트 2,000만, 직물 15억m, 곡물 1,500만, 수산물 500만, 30만ha의 간척지 개간 등이었다.

성장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북한식 경제’로 나타나는 북한 당국의 대응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책들은 북한 경제위기의 본격적인 분출 시기를 더디게 한 것뿐이었다.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예산제의 도입, 변화된 대안의 사업체제 등 부분적으로 개선된 경제정책들이 후계체제의 강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방식이 강조되면서 쉽게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54)</sup> 이로 인해 계획의 분권화를 위한 연합기업소 도입 등 합리적인 경제개선정책들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sup>55)</sup> 국방공업 중심의 중앙집권경제를 극복하고자 분권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2경제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시켰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애초의 의의를 넘어서 외채위기 등 실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수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의 분배를 독점하는 문

---

54) “지금 행정경제일꾼들이 말하는 대안의 사업체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대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 전투를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1978.5.29),”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58쪽.

55) “북한은 연합기업소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계획의 합리화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한편, 속도전도 더욱 가열하게 진행시켰다. 그러나 속도전이 진행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과도기적 성격을 무시하고 상품화폐 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돌리지 못하며 많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낭비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6개년계획이 끝나고 1977년을 완충의 해로 설정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 … 결국 독립체산제는 기업 관리를 합리화하는, 즉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내는 최적의 방법으로, 그래서 북한이 항시적으로 안고 있고, 속도전으로 인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는 자원 부족과 투자를 위한 축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 초점이 맞추어져다.”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2013), 243~245쪽.

제를 발생한다.<sup>56)</sup> 이를 극복하고자 1980년대 초 군수산업에서 민수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sup>57)</sup> 주식폰드도 계획 실패를 막는 완충적 역할로 제안되었지만 점차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앙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오히려 계획경제의 모순을 증폭시켰다.

또한 규모가 커진 북한 경제의 당시 현실에서 대외 관계의 개선을 꾀했지만 대외경제협력의 확대가 지속되지 않자, 기술적 발전의 한계가 조성되었다. 소규모 국가인 북한은 스스로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

56)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특별위원회나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꾸리는 방식이다. 북한은 군수산업의 운영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였다. … 제1경제는 국가기구인 내각이 관리하지만, 제2경제는 노동당이 직접 통제·운영한다. …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자원의 부족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원을 국가전략상 가장 우선적인 분야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이다. 생산 자재는 우선 분야의 필요를 충족시킨 후에 다른 분야에 배분된다. …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이 방식은 확실히 몇몇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소련은 우주개발계획과 첨단 군사무기 개발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중국은 대약진운동(1958~1960)의 실패가 가져온 경제적 시련기 속에서도 1964년 핵 실험에 성공했다. 북한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특수 산업 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원배분 방식은 불가피하게 후순위 분야의 계획의 변경을 강요하게 된다. 계획의 분권화와 마찬가지로 계획 실패에 대한 대응이 다시 계획적 생산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승경,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LG Business Insight』, 1139호(2011), 35~36쪽.

57) “북한은 내각 산하의 민수공장들에게 ‘일용’이라는 명칭의 군수품 전문 생산공정을 설치한 것처럼, 군수 부문의 공장과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생필)’이라는 명칭을 가진 일반소비품 생산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이 같은 생산체제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정일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수 부문의 경공업공장들의 기술이 낮고 생산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좋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2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0), 84~85쪽.

기 위해 에너지과다소비형이라는 과거의 생산 방식으로 화학비료 등 자본 투입도를 높여야만 하는 주체농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sup>58)</sup> 그리고 질적인 기술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기계 등 제3세계에 대한 수출품 경쟁력은 곧 소멸되었고, 원료를 1차 가공한 반제품 정도의 수출에 머물고 말았다. 나아가 당시 북한을 둘러싼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적정한 경제성장률을 추구하면서 경제 규모와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조절하면서 균형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앞세워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 조직적 역량에 기초하여 대중 동원식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았다. 결국 북한 특유의 조직적 사회주의와 절충주의적 경제 노선, 대외 관계를 활용한 공업화 발전 전략으로 특성화된 ‘북한식 경제’는 종합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수령제’라는 조직적 사회주의만 강하게 남게 되었다.

1970년대 지연된 경제위기는 1980년대 북한이 조직적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경기둔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이라는 파국으로 분출되었다.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는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북한 경제의 부분적 합리화, 서구와의 대외경제협력 등의 도입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국가시스템의 작동이라는

---

58)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4), 188쪽 참조.

조직적 사회주의의 긍정적 요소와 맞물려 1970년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되었다. 경제위기의 지연은 1970년대 북한 인민들에게 경제위기에 뒤따른 파국이 아니라, 과거부터 축적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향상을 낮은 차원에서 경험시켰다. 이에 대한 인민들의 향수에 김정은 체제의 강화라는 조직적 의도가 맞물려 현재 북한에서 1970년대 경제를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 6. 마치며: 오늘날 1970년대 북한 경제를 호명하는 이유

북한 당국은 확실히 ‘오래된 미래’처럼 1970년대 북한 경제를 불러오고 있다. 경제위기의 지연으로 파국과 달리 비교적 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당시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인민들은 실생활에서 경제적 만족감을 가졌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당면의 경제건설에 대한 호소로써 현재 주류세대인 장년층, 당시 주로 청소년이었던 인민들에게 지난날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향수의 근원인 ‘1970년대’를 불러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1970년대 북한 경제를 경제위기의 지연 과정으로 파악하는 필자와는 다르게, ‘경제적 전성기’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북한식 경제’, 즉 당·국가적 조직체계, 공업화된 산업구조의 가동, 경제관리의 합리화, 대외 관계의 개선 등을 실행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현실과 괴리되어 위기를 자초하는 높은 계획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강화라는 목적 속에서 1970년대 등장하여 부분적으로만 실행

된 ‘북한식 경제’를 제대로 구현해보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시장화’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당적 경제관리체제와 일관생산체제의 공업구조를 복구하는 동시에 경제관리방식을 합리화하고 대외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2014년 기업소 자체의 경영권을 부여하는 5·30조치<sup>59)</sup> 등이 담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sup>60)</sup>은 시장을 활용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비록 현재 ‘핵문제’ 등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과거 소련과 같은 우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없고 아직 무역의 다각화가 실현되지 못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증대되는 무역 규모로 경제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 피할 수

---

59)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가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한 ‘5·30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해 주목된다. 진 교수는 『한겨레신문』 22일자 기고문에서 “‘5·30 조치’로 불리는 새로운 조치로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며 “생산권, 분배권에 이어 무역권까지 원래 국가 몫이던 권력이 하방되어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썼다. 또한 “어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최근 원산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변화의 이면에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5·30조치’를 보도한 바 있는 『세계일보』는 23일 진징이 교수와의 통화를 통해 “북한이 5·30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며 “그간 일부 기업소나 공장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기업소와 공장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조직부와 내각 명의로 전국 각 기관과 기업소에 내려보낸 경제개혁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 요소를 상당 부분 허용했다”며 “관건은 5·30조치의 성공여부”라고 설명했다. “북, 자율경영권 전면화 한 ‘5·30조치’ 실시 확인돼,” 『통일뉴스』, 2014년 9월 23일 참조.

60)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전문학술지인 『경제연구』 올해 2호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강조하면서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매개 기업체들이 자체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판 시장경제,” 『연합뉴스』, 2014년 9월 10일 참조.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군이나 당, 지방 등 각 영역에서 그야말로 자력갱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경제의 밑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 사정도 호전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일관된 경제운영체계의 작동이나 경제 전략의 실행이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당조직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도약과 공업화된 산업구조의 부흥을 꾀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1970년대의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청년들도 동참하는 제2의 3대혁명운동소조운동을 주창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전국3대혁명소조 열성자회의’를 29년 만에 개최하였다.<sup>61)</sup>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1970년대를 호명하는 것에 대해 거듭된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이 1980년대 중반 수준의 복원<sup>62)</sup>이라고 밝혀졌을 때 전형적인 퇴행 전략이라고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호들이 북한 주민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것은 당시 인민생활이 좋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대중 동원 전략이라는 퇴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확대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민들의 실생활을 점진적으로

---

61) “北, ‘기술혁신의 기수’로 3대 혁명소조 부각 눈길,” 『연합뉴스』, 2014년 3월 20일 참조.

62)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이른 오늘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최고 생산수준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었던 1980년대 중엽의 생산수준이라고 말할수 있다.” 리기성,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요과업,” 『경제연구』, 1호(2009), 5쪽.



개선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 북한식 경제가 의도와 달리,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결국 경제위기의 지연에 머물렀듯이 현재 복잡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과거의 향수를 복원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당·국가체제의 경제 통제시스템 부활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1970년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이 중앙집권적 후계정치체제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였듯이, 반대의 혼란스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코르나이가 지적하였듯이 부분적인 개혁과 사회주의 원리가 결합하여 고전적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통제의 완성’ 경향<sup>63)</sup>과 유사하며, 그러한 모순된 전략이 체제전환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

물론 북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장을 활용하는 ‘선군경제 노선’을 전개하였지만 체제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적 경제 관리체제를 복원하고, 중국처럼 개발독재의 형태로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북한식의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라는 경제관리방식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여도 이른 시일 안에 공업화된 경제구조의 개선과 재가동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대외 관계의 개선을 통한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투입 없이 힘든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중무역에는 과거처럼 사회주의적 우호 관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만의 ‘계획과 시장의 공존’으로 거대한 산업 설비의 개선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어

---

63)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2), pp.396~397 참조.

려운 일이다. 오늘날 1970년대 북한 경제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 접수: 10월 31일 / 수정: 11월 25일 / 채택: 11월 28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증보판)』.

『조선중앙년감』.

김석원·박원일, 『인민경제 계획하에서 군중로선의 관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김정일,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_\_\_\_\_,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최중극,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2) 기타 자료

『근로자』.

『로동신문』.

리기성,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요과업,” 『경제연구』, 1호(2009).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현대사 1』(서울: 한울, 2004).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4).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입문』(서울: 한울, 1987).

노브, 알렉(Alec Nove),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대안경제연구회 옮김  
(서울: 백의, 2001).

『북한의 산업 2010』(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5).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서울: 대영문화사, 1994).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1998).

\_\_\_\_\_,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0).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김희정 옮김(서울: 부키, 2014).

정민수, 『북한의 이해』(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최성,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서울: 학민사, 1990).

최수영,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서울: 선인, 2006).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86).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 2) 논문

김일한, “북한 지방공업(1947~1975)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5).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2013).

양문수,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6권 1호(2003).

유승경,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LG Business Insight』, 1139호  
(2011).

- 이 석, “경제제도: 변화와 지속,” 『북한체제의 이해』(서울: 명인문화사, 2009).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6권 1호 (2003).
-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1호(2003).
-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47호(2007).
-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계의 전개,” 『통일논총』, 제5권 1호(1985).

### 3) 기타 자료

- 『뉴포커스』.  
 『연합뉴스』.  
 『통일뉴스』.  
 『한겨레21』.

## 3. 국외 자료

-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35, No.3(2007).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2).

## Review on the North Korean Style of Economy in 1970s

Lee, Changhi

(The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of Dongguk University)

The D.P.R.K(North Korea) insists that 1970s was the heyday of the North Korea's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 etc.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some opinions that North Korea's economy was in retreat in the 1970s and South Korea's economy started to get ahead.

North Korea set up its own economic system called North Korean style economy in the 1970s.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the coexistence of plan and market, a decrease in public spending based on a low-level of state social welfare, an organized socialist system with well organized party organizations at all level,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s unique line of economic construction based on foreign relations and so on.

Through these traits, North Korea escaped economic crisis in the 1960s caused by a co-current and parallel plan of economy and military

and 1970s caused by foreign liabilities. The standard of living was actually improved due to a low-level of welfare expansion even more than before. Currently, North Korea tries to reconstruct North Korean style economy of 1970s by utilizing a market based on an economic plan, reinforcing party-state system and reconstructing industrial structures.

However, it would hard to find fundamental solutions to reconstruct North Korean economy since North Korea did not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in 1970s. It means that it is likely that there are contradictions and confusions among the revitalization of markets, the reinforcement of party-state system, the problems of foreign relations.

Keywords: North Korean economy in the 1970s, North Korean style economy, the coexistence of plan and market, the socialist industrialization of nation